"공공기관 이전 낙후도 고려 헛말"

민주당 이낙연 의원 형평성·효율성 문제 제기

"광주·전남 타지역 비해 불이익 심해"

참여정부가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기관 이전에 지역 낙후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영광·함평)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공공기관 이전 원칙을 '형평성과 효율성'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국가균형위원회로 제출받은 '공공기관 이전에 다른 기관별 파급효과 평가 점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남의 낙후지수는 95.63으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3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기여도(평가점수)는 249.9점을 받는데 그쳤다.

이에 반해 전남도보다 낙후지수가 낮은 강원도(84.07), 경북(80.48), 경남(72.72)의 지역발전 기여도는 각각 243.9, 242.5, 234.2점을 기록, 전남과 별다른 차이가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광주시도 지역적 낙후도가 68.16을 나타냈으나 지역발전 기여도는 123.7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지역별 공공기관 유치효과

지역	이전 공공 기관수	지역발전 기여도 (평가점수)	지역 낙후 지수
전남	**15**	**249.9**	**95.63**
강원	13	243.9	84.07
전북	13	242.6	92.63
경북	13	242.5	80.48
경남	12	234.2	72.72
충북	15	216.3	78.14
대구	12	197.8	67.37
부산	12	194.3	72.75
울산	11	182.5	43.01
광주	**3**	**123.7**	**68.16**
제주	9	120.6	68.71
충남	6	96.6	72.87
연기·공주 행정도시	41	509.4	

※지역 발전 기여도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 평가점수를 합산한 것이고, 지역 낙후 지수는 클수록 낙후된 상태임

광주시보다 지역적 낙후도가 훨씬 낮은 울산(43.01)과 대구(67.37)의 지역 발전 기여도는 182.5, 197.8점를 기록, 광주시보다 6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확보했으며 지역적 낙후도가 비슷한 부산(72.75)도 기여도는 194.3점을 받았다.

이낙연 의원은 "낙후지수에 따라 낙후도가 높은 지역에는 지금이라도 더 많은 기관을 배치하고 특히 광주지역에 더 많은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이전 기관의 수나 특성을 대략적으로 수치화해 본 것에 불과할 뿐 이전지역 발전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평가기관인 균형발전위원회의 입장"이라면서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는 평가 취지가 잘못 전달된 데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대정부질문 공방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13일 오전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호진 前 노동장관 차기 대권주자 유형별 분석

정동영 '행동형' 고건 '실사구시' 박근혜 '여전사'

국민의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호진 고려대 명예교수는 13일 펴낸 '대통령과 리더십'이란 책에서 정치인 유형을 행태적 관점에서 △거래형 △승부사형 △지사(志士)형 △테크노크라트형 △수습사원형으로 분류하고 그 특징들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콤플렉스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균형감각이 있어 사물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지도자로서 책임윤리에 충실하다"며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거래형' 정치인은 도덕불감증에 빠지기 쉬워 '철새'가 될 수 있고, '승부형'은 대중 정서를 읽는 통찰력은 뛰어나지만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사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하지만 명분에 집착하고 도덕적 결벽증이 심한 게 단점이며, '테크노크라트형'은 정책 마인드와 전문성이 돋보이나 대중성은 약한 것으로 분석했다.

'386' 초선의원으로 대표되는 '수습사원형'은 미래 지향적이고 개혁적이지만 이념적인 편집증이 지나쳐 타협을 거부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무모함이 있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대중 정서에 밝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순발력 있는 언변으로 표심을 뒤흔드는 역동적인 '행동형'이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여성적인 부드러움으로 대중적인 카리스마를 내뿜는 '여전사형'"이라고 평했다.

그는 또 "관직을 두루 거친 고건 전 총리는 안정감 있는 '실사구시형'이고 개혁 성향의 김근태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은 한국 사회의 이상과 현실을 점맥시키고자 애쓰며 고뇌하는 '지사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서울 시장을 '맨손으로 황무지를 갈구는 개척시대 창업가형'으로,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정책 마인드가 강하고 기획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기술관료 타입의 직업 정치인'으로 각각 평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靑 "대통령 댓글은 행정수반의 의견"

청와대가 13일 '대통령 댓글' 논란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내놨다.

요약하면 대통령의 댓글은 일반 네티즌의 댓글과는 구별되는 국가원수로서의 공적 행위이며, 따라서 대통령 댓글에 대한 시비 걸기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비이성적 공세라는 것이다.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디지털시대의 아날로그 논쟁'이란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이 현재 국정브리핑 정책기사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은 행정부 수반의 의견이지 댓글이 아니다"며 " 정책 현안에 대해 지시나 의견 표명, 코멘트, 업무 독려 차원에서 보내는 메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믿었던 그들마저… 역사인식 0점

대만교과서 '한국은 중국 식민지였다'

대만 정부 교무위원회 산하 화문네트워크 교육센터(www.ocac.gov.tw)가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였다고 다시 주장하고 있어 한국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반크는 2004년 8월22일 이 교육센터 사이트에 '한국이 과거 중국의 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다'고 표기한 사실을 발견해 강력히 항의해 4일 뒤 '중국의 이웃나라인 한국'으로 바로잡는 결실을 이끌어냈다.

당시 이 기관은 "대만 정부는 한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해당 웹사이트는 외주 제작이었고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내용 전달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즉시 사과했었다.

그러나 교육센터는 1년 8개월만인 13일 현재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라는 왜곡된 내용을 사이트에 다시 올렸다.

특히 이 기관은 영어 표기 부분은 '중국의 이웃나라인 한국'으로 그냥 둔 채 중국어로 된 부분만 고쳐 놓았다.

반크 박기태 단장은 "이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맞물려 중국어를 읽을 수 있는 세계 화교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주입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고구려 역사를 강탈하려는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한창이던 때에는 한국인이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시정했다가 관심이 줄어들자 다시 은근슬쩍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이어 "중국과 외교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대만 정부도 중화사상이라는 큰 틀에서는 서로 합의해 동북공정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덧붙였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로이터 뉴스사이트 '울릉도는 일본땅'

로이터 통신을 운영하는 로이터 파운데이션의 '평화 인도적 뉴스 공급 사이트'(www.alertnet.org)가 울릉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www.prkorea.com)에 따르면 이 사이트 한국 국가소개 부분을 클릭하면 지도상에서 울릉도가 일본 땅과 같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지도 상단 줌 기능을 통해 울릉도를 선택하면 울릉도에 영어로 'Japan'이라고 선명하게 표기돼 있다.

이 사이트의 소개 자료에 따르면 1997년 로이터 파운데이션이 설립한 이 사이트는 세계 인권문제가 제기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뉴스 공급 사이트다.

150개 이상의 국가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있는 이 사이트의 뉴스는 세계 300곳 이상의 인권기구와 평화단체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연간 접속자는 300만명이며 매주 1만명의 독자에게 e-메일로 뉴스를 공급한다.

이에대해 반크는 "지난 6일 이 사이트에 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e-메일로 보냈지만 아직 대답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北 회담 복귀 땐 '양자회담' 용의"

美 6자회담 수석대표 힐 차관보 밝혀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3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양자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반면 북측이 핵무기를 계속 추구할 경우 미국의 금융분야에 대한 엄격한 조사도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오찬 강연에서 "6자회담 진전을 위해서는 양자회담도 중요하다. 논의를 시작하면 얘기할 것이 많을 것"이라며 양자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회담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북측에 '6자회담 틀내에서의 양자회담'이라는 일종의 유인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제5차 1단계 6자회담까지 6자회담에서 북측과 접촉해왔지만 '양자회담'이라는 표현은 삼가왔다.

힐 차관보는 BDA 사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BDA의 일처리가 대부분 수기로 이뤄져 조사 종료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며 "수년은 아닐지 몰라도 수 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회담복귀의 조건으로 BDA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동결조치로 묶인) 2천400만달러는 6자회담이 재개돼 북한에 에너지 지원이 이뤄지면 1주일 분의 에너지(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이라며 북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힐 차관보는 "BDA 뿐 아니라 중동 등에서도 북한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돈세탁 등 불법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며 "핵무기에 관한한 북한의 재정상황과 활동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는 경고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계속하려는 한 우리가 북한의 금융분야를 철저히 조사하게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한다"면서 "한 국가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해 플루토늄을 재생산하고 (핵)무기 제조와 탄도미사일 계획을 지속할 것이라고 공언한다면 그 국가에 대해 금융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